

트럼프, 약가 인하 위한 행정명령 서명

Analyst 이선경 seonkyoung.lee@sks.co.kr / 3773-9089

SK증권 리서치센터

- 미국 내 약가 인하를 위한 광범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, 관련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
- 제약사, 보험사, 유통사 등 대상, 가격 투명성 제고 및 인하 조치 본격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
-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, 법적/구조적 한계로 인해 단기내 추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소비자 구매 프로그램 촉진, 유럽 약가 시스템 조정 압박 가능성 존재함에 따라 제약사의 피해는 제한적일 수 있는 상황

[주요 내용]

1. MFN(Most Favored Nation, 최혜국 대우) 정책 도입 추진

- 선진국 대비 고가로 판매 중인 처방약에 대해, 최저 국가 약가 수준으로 미국 내 가격을 조정하는 MFN 정책 추진
- 제약사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, 연방정부 권한을 활용해 직접 가격 인하를 강제할 방침

2. 복지부 장관의 구체적 실행계획 요구

- 행정명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MFN 기반 가격 인하를 위한 “명확한 목표 설정” 및 실행안 마련 필요

3. 제약사 비협조로 인해 목표 달성 위한 진전이 없는 경우 강경 조치 예고

- (1) 연방정부 권한을 통한 직접 가격 규제 시행 > 트럼프 1기 위헌 소지로 인해 무산된 이력 존재
- (2) 캐나다를 포함 해외에서 저가 의약품 수입 추진 > 저가 의약품 수입은 관세 정책과 충돌 가능성 존재
- (3) 미국 제약사의 해외 수출 제한 조치 검토

4. 약가 인하 효과에 대한 구체 수치 제시

- 기존 가격 대비 최대 90% 수준까지 인하 가능성 강조

5. 약가 투명성 강화

- 의약품 관련 주체들에 대해 실제 거래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 포함
-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유도

6. 중간 유통업체 배제 및 직접구매 체계 검토

- 약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PBM 및 유통사 리베이트 중단
- 환자에게 직접 리베이트 혹은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구매 프로그램 확대 방안 검토

7. 유럽 약가 구조 비판, 유럽과의 불공정한 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

- 유럽은 경쟁 입찰 통해 약가 인하, 이는 제약사에게 저가 제품 공급을 강요
- 제약사 수익성 보전을 위해 미국 내 약가 인상 구조가 형성, 불공정한 구조 개선 필요

[Comment]

- 약가 인하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은 명확하나 세부 실행에 따른 법적/정책적 불확성 여전히 존재
-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러 장벽이 존재함에 따라 단기내 약가 실현 가능성 불투명
- 직접 구매 체계 구축 외에도 유럽 등 선진국 불공정한 약가 조정 압박 가능성 존재함에 따라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사의 피해는 제한적일 수 있는 상황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